

무정부상태에서 기업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윌리엄 달림플 지음, 최파일 옮김, 『동인도회사 제국이 된 기업』(생각의힘, 2025)을 읽고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문화비즈니스전공 교수

I. 들어가며

신고전학파는 기업의 본질을 구입한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직 및 경제주체로 정의하고 있다(최승희, 2002). 이러한 신고전학파의 정의에 따라 기업을 규정하면, 기업은 기술적 생산조건하에서 생산요소와 생산물에 대한 최소비용에서 최대 이윤을 취득하는 존재, 즉 단지 재화를 만들고 판매하여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기업의 ‘기술적’ 특징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기업의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그에 대응하는 조직 형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국경을 넘어 생산하고 판매한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은 시장의 가격뿐 아니라, 시장 진입에 대한 자격과 조건까지도 사실상 결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기술 및 가격 요인에 의한 규모 경쟁을 통해서만 기업 규모를 키우고 시장을 장악해 온 것이 아니라, 시장 접근권과 규칙 설정을 통한 지대 획득에 의해 성장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무정부상태에서 기업이 시장 진입 및 장악에 관한 무제한의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면, 기업은 시장을 단순히 경쟁과 혁신의 공간으로 두지 않고, 권한이 집중되는 소위 ‘문지기’ 공간, 곧 권력의 경제로 변질시킬 위험이 커진다.

국가가 국내외 시장에서 열세를 보이고, 혁신 기반에 의한 성장은 어려우며, 고립과 파멸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가는 새로운 권력의 도구를 만들어 현세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기업은 교역의 주체일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는 권력 장치로 설계된다. 고립되고 파멸 직전으로 묘사되는 역사적 국면에서, 영국 정부는 거대한 주식회사를 세우고 이 기업에게 주권 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다. 특권과 권능이 주어지는 순간, 어디까지가 기업이고 어디까지가 시장인지, 즉 기업과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기업의 밖은 시장이고, 기업의 안은 내부 조직이다. 기업 밖의 시장은 가격, 정보, 거래비용, 탐색비용, 계약비용, 감시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요구한다(김용열, 2002). 시장은 나름의 규율과 압력에 의해 이러한 비용을 조정하며, 그 과정에는 규제와 통제가 결합된다. 그러나 기업 및 시장을 둘러싼 규제와 통제가 사라진 무정부상태가 되면, 정보 수집 및 탐색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계약과 감시 비용은 통제 없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결국 시장은 권력과 규율을 정하는 존재에 의해 장악된다. 이것이 독점이다. 독점은 시장에 하나의 플레이어만 남기게 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독점력으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아사다 미노루(Minoru Asada, 1989)가 동인도회사의 지배구조와 무역활동에 집중한 것과 달리, 달림플은 이 책을 통해 무정부상태가 동인도회사를 무자비하게 성장시켰다는 점을 부각한다. 무정부상태는 결국 국가로부터 주권에 가까운 권력을 부여받은 기업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규율을 정하는 존재가 되며, 나아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파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무정부상태에서 무한한 권한을 이양받은 기업은 결국 대리인 문제를 야기한다. 기업의 본질을 논할 때, 누가 소유하고 통치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권한과 역할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는 결국 지배구조의 문제이며 경영효율성의 문제다. 정부가 기업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상태에서 시장이 무정부상태로 흘러갈 때, 지배구조와 배분은 절대적으로 기업이 장악하게 된다. 주인은 영국에 있지만, 현지에 있는 회사는 사실

상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이로부터 이익을 갈취하고, 권력은 끝없이 남용된다. 주인보다는 대리인 중심으로 시장을 규정하고 종속시키며, 규칙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리인이 기업 경영의 전반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는 시장을 왜곡시키며 파멸로 이끈다. 즉 시장실패이다. 우리가 1997년 소위 IMF 금융위기 시기에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역시, 이러한 권력구조와 대리인 문제에 기인한 시장실패를 체감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실패로 인해 기업이 시장을 파괴하는 존재가 될 때, 다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정부는 독점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영국은 인도 식민지 시기만 해도 근대적 의미의 독과점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 세계 최초의 근대적 독과점 규제법은 1890년 미국에서 제정된 셔먼 반독점법으로, 철도 산업에서 대규모 독점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계약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즉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규제 형태로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는 그러한 독과점 규제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독점의 폐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권한의 부여를 취소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이에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의 독점적 폐해를 통제하고자 동인도회사가 보유하던 인도 내의 통치 기능과 자산을 국유화하여 영국 정부의 관할로 이관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윌리엄 달림플은 이 책을 통해 동인도회사가 영국의 고립과 피해를 탈출하기 위한 무역회사로 출발하였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승인한 특권을 기반으로 주권 기능을 행사하면서 시장에서 독점 교역권, 군사력 집행권, 관할과 사법, 주화 발행 및 유통권, 세입 징수권 등을 확보하여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바꾸는 존재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특히 무정부상태에서 질서가 무너질수록 ‘질서 공급자’는 정당화되고, 저항은 분산되며, 수탈은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 된다. 결국 동인도회사는 ‘시장’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파편화된 사회의 붕괴 위에서 통치권을 수익화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기업 집중과 다국적화가 만들어내는 위협, 즉 기업이 단순한 경제적 행위자가 아니라 준주권적 행위자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달림플이 동인도회사에서 제시하는 제국적 과잉과 통합, 즉 (회사 권능의

회수 및) 국유화/국가 관할로의 이관은 시장 실패가 심각해질 때 정부 개입이 왜 불가피해지는지를 시사한다. 이는 곧 기업이 시장 진입과 질서 유지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지나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본 서평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1) 시장 진입과 활동에서 무한한 권한이 주어지는 권력 기업의 탄생을 먼저 고찰하고, 2) 그 권한이 무제한으로 확대될 때 수탈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검토하며, 3) 주인-대리인 구조와 인도 내부의 파편화가 주권적 회사를 통해 제국화되는 과정을 가져오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로의 권능·자산 이관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궁극적으로는 동인도회사가 보여준 ‘권력의 기업화’가 오늘의 기업 집중 시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그 위험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질문을 남기고자 한다.

II. 권력기업의 탄생과 시장

달림플은 동인도회사가 1599년 런던 상인들의 모임에서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작은 출발’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인도회사 제국이 된 기업』이 보여주는 동인도회사의 성공은 경쟁 기반의 시장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결과가 아니다. 이 회사의 결정적 자산은 기술이나 혁신이 아니라, 왕실 칙허로 부여받은 특권이다. 동인도회사는 독점무역권뿐 아니라 무장과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군사권, 신민을 통할하고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과 사법권, 화폐를 주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통화권, 그리고 제품 판매보다 징수에 의한 이윤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세입 징수권에 이르기까지, 주권 기능에 가까운 권능을 부여받았다. 즉 동인도회사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권리와 권능을 집행하는 준주권적 기업으로 처음부터 탄생한 것이다.

이 책의 첫 번째 핵심은 ‘무역’이 아니라 특권(privileges)이다. 시장에서의 성과가 기업을 키운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확보한 특권이 시장과 정치의 규칙을 바꾸

면서 기업을 키웠다는 점을 달림플은 강조한다. 동인도회사의 경쟁력은 생산적 요소라기보다 배타적 진입권에 있다. 이 책에서 독점은 단순히 가격을 좌우하는 힘에 그치지 않는다. 독점은 무엇보다도 누가 시장에 들어오고 누가 나갈지를 결정하는 힘이다. 동인도회사의 왕실 칙허는 바로 이 배타성을 ‘국가’의 이름으로 보증했고, 이렇게 차단된 시장에서 이윤은 생산성의 보상이라기보다 권리의 배당이 된다. 따라서 동인도회사의 존재 방식은 처음부터 “효율적 생산”보다 “권리의 유지·연장·확장”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동인도회사가 민간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권능을 위탁하고, 기업은 그 권능을 활용하여 독점을 만들고 보호하면서 위험을 외주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동인도회사가 부여받은 특권은 무역·군사·사법·통화 기능·신민 통제 등 전반을 포괄하며, 기업 활동을 시장 위에 군림하는 통치적 권능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기업이 규칙의 대상이 아니라 규칙의 집행자가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은 공공재로서의 안정 및 공정과 충돌한다. 이 충돌 속에서 회사의 이윤은 가격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권한이 만들어내는 지대(rent)로 전환된다.

하지만 국가는 이 지점에서 뒤로 빠져 있음으로써, 수탈적 경영활동의 비용과 책임은 사실상 회사의 활동 속으로 흡수된다. 즉 동인도회사는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고 교역하는 조직이 아니라, 무장과 폭력 가능성을 포함하는 존재가 된다. 시장 논리와 군사적 폭력이 분리되지 않는 기업은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폭력적 활동을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되며, 달림플은 이 점을 이 책에서 매우 명확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해 ‘혁신’이 아니라 ‘권력’이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 되고, 경쟁은 생산성 경쟁이 아니라 특권의 밀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자극된다.

결국 동인도회사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의 핵심 기능 일부를 기업 형태로 외주화하여 만든 권력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회사는 독점적 교역권을 발판으로 군사력과 법집행, 통화 기능, 재정 접근권으로 이동하며, 시장 안의 행위자에서 시장을 구성하는 ‘규칙의 주체’로 변화한다. 이때 회사의 이윤은 생산성의 보상이라기보다 주권 권능이 만들어낸 지대로 형성된다.

따라서 『동인도회사 제국이 된 기업』에서 제국의 탄생은 “기업이 국가가 된 사건”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기업에 권능을 내려주고 기업이 그 권능을 집행하는 구조가 확장된 사건이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 목적이 공공재의 목적(안정·공정)과 충돌할 때, 그 충돌은 필연적으로 수탈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III. 수탈의 제도화와 기업의 폭주

무정부상태에 놓인 인도 시장을 막강한 권력을 통해 지배하게 된 동인도회사는, 수탈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권한을 제도화하였다. 이 책에서 회사는 이윤 극대화의 대상을 생산과 교역의 확대가 아니라 지대 추구 활동에 두고 움직인다. 그러나 지대 추구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발적 약탈이나 일회성 강제가 아니라, 그것을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달림플이 말하는 무정부상태란, 무굴 권력의 약화와 지역 권력의 난립, 약탈과 전쟁의 반복, 그리고 치안·사법·통화 신뢰와 같은 공공재의 붕괴가 지속되고 악화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수록 동인도회사는 징수와 집행 권한을 확대해 나갔으며, 그 집행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제력과 결합하면서 수탈은 제도화되고 일상화된다. 다시 말해 ‘수탈의 일상화’가 곧 ‘폭주’로 전환되는 경로가 형성된다.

인도의 무정부상태는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린다. 치안과 이동, 계약과 교역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거래비용은 폭등한다. 이때 시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는 물건을 공급하는 주체라기보다, 치안을 유지하고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이다. 동인도회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군사적 수단을 배경으로 상업적 존재를 넘어선다. 회사는 ‘보호’라는 명분으로 배타적 특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규칙을 집행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무정부상태가 초래한 공공재 붕괴는, 역설적으로 회사가 스스로를 ‘질서 공급자’로 정당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그 정당화는 회사 권능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집행기관으로 등장한 동인도회사는 세입권력을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지대

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세금 징수권을 확보하는 순간, 회사는 판매 중심의 기업에서 징수 중심의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그 결과 기근과 전쟁, 공급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세입은 자동으로 감소되기보다 오히려 집행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회사는 징수와 집행을 결합하여 배분을 설계하는 권력자가 되며, 약탈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배분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 무정부상태가 심화될수록 ‘질서 유지’의 정당화를 통한 통치권은 확대되고, 그 확대된 통치권은 다시 세입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어진다. 즉 세입제도는 충격을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증폭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폭주의 메커니즘은, 수탈제도가 “성공”할수록 지역 기반의 생산과 세원이 약화되는 자기파괴성을 내포한다. 특히 1770년 벵골 대기근 국면에서 드러난 회사의 수탈은 대규모 사망과 사회 붕괴를 동반하였다. 수탈이 제도화되면서 회사의 수익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정책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유지되어야 하는 고정 목표로 작동한다. 회사는 배당을 해야 하고, 배당을 위해서는 세입이 필요하며, 파편화된 사회에서 집행은 폭력과 결합되기 쉽다. 그 결과, 폭력적 징수는 사회의 회복력을 파괴하며, 수탈의 폭주는 더욱 강화된다. 특히 현지의 고난이 심화되어 현장 집행 성과가 낮아질수록—즉 세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수록—오히려 집행 강도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는 다시 가격 폭등과 취약계층의 붕괴, 생산성 악화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유발한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수탈이 “도덕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자기 파괴로 귀결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탈은 지역사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수익 기반(세원) 자체도 훼손한다.

결국 이 책에서 무정부상태는 단순한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동인도회사가 ‘무역회사’에서 ‘징수·집행·통치의 회사국가’로 변신하도록 만드는 환경이다. 달림플이 보여주는 동인도회사의 수탈은, 아나키(무정부상태)가 만든 구조 위에서 구축된 수탈 제도의 완성이며, 그 제도는 자기강화와 자기파괴를 동반하는 폭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 책은 수탈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제도화된 수익모델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로 읽게 만든다.

IV. 주인-대리인과 파편화, 그리고 파멸의 국유화

이 책에서 말하는 ‘아나키(무정부상태)’는 동인도회사를 성장시킨 핵심 조건이 인도 내부의 파편화였음을 보여준다. 무굴 권위가 약화되고 지역 권력이 난립하며, 약탈과 내전이 반복되고, 델리와 같은 경제와 권력의 중심부가 황폐화될수록 공권력은 붕괴된다. 이러한 파편화를 집요하게 파고든 동인도회사는 분열된 권력들과의 거래 속에서 협상과 개입 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동시에 개입 명분을 키워 스스로를 ‘질서 공급자’로 위치시킬 수 있었다. 그만큼 저항은 분산되었다. 회사는 외부인이었지만, 파편화된 내부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연결·중개하는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어느 순간부터는 게임의 설계자로 기능하게 된다. 파편화는 회사에게 “정복”이라기보다 거래 가능한 통치를 제공한 셈이다.

파편화가 수탈과 통치를 용이하게 만드는 경로임은 분명하다. 파편화는 저항을 분산하고, 연합을 지연시킨다. 무엇보다도 파편화는 통치 실패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수탈에 대한 책임의 소재까지 불명확하게 만든다. 수탈 책임의 불명확성은 다시 수탈과 통치를 더 쉽게 만든다. 이때 회사의 통제는 단지 군사력이라는 무력에 의해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질서’가 갖는 정치적 가격—곧 질서를 제공하는 자가 정당화되는 구조—에 의해 더욱 공고해진다.

여기에 주인-대리인 구조가 겹치면서 회사의 현지 통치와 수탈은 한층 강화된다. 런던의 주인인 주주와 본사가 배당과 안정적 수입을 원했다면, 현지 대리인인 관리자들은 파편화된 현장에서 정보 우위와 재량권을 기반으로 단기적 지대 추구에 더욱 민감해지기 쉽다. 원거리 조직에서 주인은 현장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고, 대리인은 정보 우위와 재량권을 갖는다. 특히 파편화된 사회에서는 대리인의 재량권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무역 대리인은 수탈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려 하고, 통치 대리인은 세입과 전쟁을 사실상 주도한다. 그 결과 회사는 내부적으로 더 이상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권능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버넌스 과대 조직으로 전환된다. 이를 상징하는 사례가 헤이스팅스 탄핵이다. 이는 대리인 문제(현지 통치의 책임과 통제)가 본국 정치로 역류했음에도, 회사 체제 내부에서는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던 대표적 장면으로 읽힌다.

과편화와 대리인 문제가 결합되면서 회사는 결국 제국적 과잉으로 치닫는다. 권력은 커졌지만 책임은 모호해지고, 통치 범위는 확장되었지만 내부 통제는 따라가지 못했다. 회사는 더 이상 회계·법인·계약의 논리로 작동하는 ‘기업’으로서 통제되기 어렵고, 거대한 군사·행정·재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이한 존재가 된다. 특히 군사적 지배가 통치와 징수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회사는 “더 강해지기 위해”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확장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체제로 변한다. 이것이 제국적 과잉의 본질이다.

결국 이러한 과잉과 내부 붕괴를 수습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등장한다. 회사가 과편화 속에서 주권 기능을 흡수해 커질수록, 그 주권 기능은 회사 형태로 감당 불가능한 시스템 리스크가 된다. 내부 분열(대리인 폭주),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책임 구조 붕괴, 탄핵사건과 규제에 의한 본국 정치로의 역류, 그리고 재정적 위기까지—이 모든 것은 회사국가가 ‘너무 커져서’ 발생한 거버넌스 실패다. 이때 국가는 국유화라는 통합의 해법을 내놓는다. 분권화된 거버넌스로는 유지 불가능해진 주권 기능과 인도 내 자산을 국가가 회수하여, 제도적으로 수습하는 방식이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실패를 인정하는 지점에서 정부 개입이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회사는 끝까지 주권의 잔여권(residual sovereignty)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주권의 잔여권을 흡수하여 권력이 회사로 이동하도록 만들고, 제국을 ‘껍데기만 남는 상태’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는 회사의 확장 논리와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결국 인도 자산의 국유화라는 정부의 시장개입(권능 회수·관할 이관) 속에서 동인도회사는 막을 내린다.

회사의 인도 정복은 세계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기업 폭력의 사례로 남았다. 군사화된 기업은 영토 야욕 이상의 피해를 낳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상자와 수탈, 그리고 전쟁을 남겼다. 비록 동인도회사의 설립이 주식회사라는 유럽의 혁명적 발명품을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였다고 하더라도, 인도와 남아시아는 수탈과 약탈로 얼룩졌으며 제도적·사회적 변화 또한 심각하게 겪어야 했다. 기업은 국가의 운명을 운택하게 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지만, 권력과 무책임성이 결합될 때 어떤 존재보다 강하고 위협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은 보여준다. 서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기업은 핵심적 장치였

으나, 기업 권력의 오남용은 주주 이익이 국익으로 포장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기업이 권력의 형태로 변신할 수 있음을 『동인도회사 제국이 된 기업』은 설득력 있게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속 생산과 거래를 통한 이윤 극대화라는 본질을 벗어나 시장접근 권한과 규칙을 만드는 존재가 될 때 시장은 수탈되고 파괴될 수 있음을 이 책은 잘 보여준다. 이윤이 혁신의 보답이 아니라 권한의 지대로 변하고, 경쟁이 비용절감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경쟁이 아니라 접근 차단과 규칙 설계에 의한 게임이 되면, 시장에는 경쟁이 아니라 싸움과 전쟁, 그리고 수탈만이 남게 된다.

한국의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재벌 역시, 규모 자체보다 계열 네트워크와 수직·수평적 통합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가격 경쟁이 아닌 지대 추구적 행태로 기술 위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 진입 및 경쟁 규칙을 사실상 설계하는 ‘게임의 설계자’로 이동하면서, 준주권적 권력자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경계해야 한다. 기업의 본질을 벗어난 권력화는 결국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지대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경쟁을 통한 성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규칙과 접근권의 공정한 설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6년 3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31일

참고문헌

- 김용열. 2002. 『기업이란 무엇인가』. 서울: 이슈투데이(주).
- 좌승희. 2002. 『기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조명』.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Asada, Minoru. 1989. 『동인도회사 East India Company』, 이하준 역, 서울: 파피에.